16-42호 2016.10.31

현안과 과제

국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및 전망
- 2017년 말 가계부채 1,500조원 내외

현대경제연구원

■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견해임을 밝혀두며, 보고서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국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및 전망

- 2017년 말 가계부채 1,500조원 내외

Executive Summary ····· i

1. 최근 가계부채 현황 ····· 1

2. 가계부채 증가 원인 및 전망 ····· 2

3. 시사점 ····· 6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동향분석팀 : 조 규 림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jogyurim@hri.co.kr)

Executive Summary

□ 국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및 전망

■ 최근 가계부채 현황

최근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의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율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5년 하반기 이후 10%를 상회하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는 2016년 2분기 말 현재 전년동분기 대비 123조 원이 증가한 1,257조 원을 기록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을 짚어보고 2017년 가계부채 규모를 전망하고자 한다.

■ 가계부채 증가 원인 및 전망

1)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저금리 지속) 2016년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5%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OFIX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여신금리 하락으로 가계의 차입 비용이 감소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주택시장 활황)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2016년 크게 상승하면서 주택시장의 활황을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도 2008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 역시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가계소득 부진)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의 기타 대출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용도별 신용대출 비중을 보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비 및 부채상환용 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등 가계의 소득 부진에 따른 생활비 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017년 가계부채 규모 전망

(가계부채 전망) 2017년 국내 가계부채 규모를 전망하기 위해 주요 경제변수인 국내총생산, 소비자물가지수, CD금리, 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이용한 벡터자기회귀모형을 구축하고 전망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2016년 말 약 1,330조원, 2017년 말에는 약 1,460조원으로 2016년 대비 9.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점

첫째,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내 가계부채의 특성상 정부 정책 수립 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상대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대책 및 서민금융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

1. 최근 가계부채 현황

○ 최근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

-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며 2016년 2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1,257조원을 기록[1)]

- 국내 가계부채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율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5년 하반기 이후 10%를 상회하는 수준이 지속
-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2016년 2분기 말 현재 전년동분기 대비 126조원 증가한 1,257조원을 기록

- 특히 부동산 경기 호황이 지속되며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

-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16년 5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며 8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3.9%를 기록
-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나며 2016년 8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1.5%를 기록

<국내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율.

<대출 종류별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1)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기준.
2)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1) 본 보고서상 가계부채는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인 가계신용을 의미.

2. 가계부채 증가 원인 및 전망

1)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 (저금리 지속) 경기 둔화로 인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차입 비용이 감소해 대출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

- **2016년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5%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OFIX도 최저[2)]**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1년 6월 3.25%에서 2016년 10월 현재 1.25%로 지속적으로 하락
  -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OFIX도 2010년 1월 3.88%에서 2016년 현재 1.35%까지 하락

- **저금리 기조에 따른 여신금리 하락으로 가계의 차입 비용이 감소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작용**
  -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6년 2분기 현재 2.9%, 신용대출 금리는 4.4%로 하락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COFIX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
주 : COFIX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 및 대출 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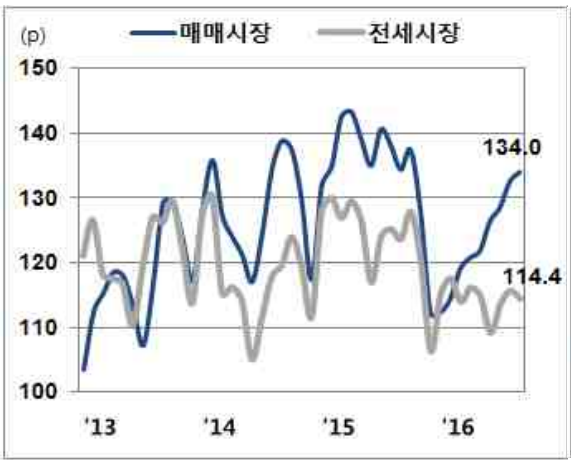
2) COFIX(Cost of Funds Index)는 국내 8개 은행(정보제공은행)들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서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됨.

○ (주택시장 활황) 주택매매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분양물량과 주택담보대출도 빠르게 증가

- **주택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중 매매시장은 2016년 크게 오르고 있는 반면 전세시장은 보합세[3)]**
  -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015년 4월 143.3p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급락했으나 2016년 9월까지 134p로 급등하는 모습임
  - 반면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015년 4월 129.4p로 주택매매시장과 함께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16년 9월 114.4p를 기록함
  - 이는 주택에 대한 소비자심리가 전세보다는 매매 수요가 최근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암시[4)]

- **2015년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08년 이후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10년대 초 20~30만호 수준을 보이다가 2015년 51.8만호 2016년 39.1만호로 증가세를 보임
  -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2015년 8.8%, 2016년 2분기까지 12.9%로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



자료 : 국토연구원.

<아파트 분양 물량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부동산114.
주 : 2016년 분양물량은 예상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분기 기준.

3) 95~115p 구간은 보합국면으로 주택시장의 활성화 정도가 전월대비 큰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수준, 상승국면(115p 이상은 상승국면, 95p미만은 하강국면을 의미함.
4)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구의 33.2%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주택전세가구의 10.8%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함.

○ (가계소득 부진) 가계소득 부진이 지속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비 등을 위한 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

- 가계의 실질소득 부진이 지속되면서 생활비 등을 위한 신용대출 수요가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
  -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2015년 3분기 이후로는 0%대의 증가율을 나타냄
  - 한편 신용대출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의 기타 대출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가계소득의 부진이 생활비 등을 위한 대출 수요 확대로 이어졌을 가능성

-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비 및 부채상환을 위한 신용대출 비중이 증가
  - 전체 가구의 생활비 및 부채상환 등을 목적으로 한 신용대출 비중은 2012년 40.1%에서 2015년 43.0%로 확대
  - 특히 1, 2분위 등 저소득층의 경우 비중이 각각 2012년 54.3%, 41.9%에서 2015년 61.6%, 48.0%로 7.3%p, 6.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가계소득 및 기타 대출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가계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실질가계소득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율.
2) 기타 대출은 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율.

< 소득수준별 생활비 및 부채상환 용도 신용대출 비중 >

(%)

	2012	2013	2014	2015
전체	40.1	40.5	41.3	43.0
1분위	54.3	48.7	59.3	61.6
2분위	41.9	50.4	49.9	48.0
3분위	44.5	45.7	47.3	52.7
4분위	41.3	40.2	39.8	46.2
5분위	34.7	33.9	34.7	34.6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주 : 소득수준별 신용대출의 용도 중 부채상환, 생활비 마련 및 기타 용도 등의 비중 합.

2) 2017년 가계부채 규모 전망

○ 2017년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약 1,460조원으로 2016년 대비 9.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국내 가계부채 규모를 전망하기 위해 주요 경제변수들을 이용한 벡터자기회귀모형을 구축하고 전망치를 추정**
  - 벡터자기회귀모형(VAR, vector autoregression model)은 경제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모형의 주요 변수를 내생변수로 설정하는 모형
  - 국내총생산, 소비자물가지수, CD금리, 주택가격지수, 가계부채 자료를 이용해 5변수 VAR 모형을 구축[5]
  - 표본기간은 2002년 4분기에서 2016년 2분기이고, 추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2016년 3분기에서 2017년 4분기의 가계부채 전망치를 도출
  - 2017년 국내총생산 및 소비자물가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치를 감안하였으며, CD금리는 약 0.3%p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 **추정 결과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2016년 말 약 1,330조원, 2017년 말 약 1,460조원으로 전망**
  - 2016년 말 국내 가계부채는 약 1,330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0.6%, 2017년 말에는 약 1,460조 원으로 9.8%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전망치를 추정하는 모형의 특성 및 정부의 정책 효과 배제 등으로 인해 전망치의 불확실성이 큰 점에 유의

-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7년 말 약 159%에 달할 것으로 예상[6]**
  - 현대경제연구원의 2016년 및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가계부채 전망치를 바탕으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전망치를 추정[7]
  -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 말 약 152%, 2017년 말 약 159%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5) 모형의 변수는 Goodhart & Hofmann(2008), 한상섭(2011) 등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선정.
6) 명목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국민처분가능소득.
7) 현대경제연구원의 2016년 2.5%, 2017년 2.6%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적용해 실질 GDP 전망치를 산출한 후 과거 평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및 국민총생산 대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비율을 적용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국민처분가능소득 전망치를 추정하여 적용.

< 2016년 말 및 2017년 말 가계부채 전망 >

구 분	2015년 말	2016년 말(E)	2017년 말(E)
Lower bound	1,203조원 (144%)	1,300조원 (148%)	1,380조원 (150%)
Baseline		1,330조원 (152%)	1,460조원 (159%)
Upper bound		1,360조원 (155%)	1,540조원 (168%)

자료 : 한국은행,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말잔 기준.
2) 2015년은 실적치, 2016~2017년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전망치.
3) Lower bound 및 upper bound는 예측오차를 고려한 전망치의 상하한을 의미.
4) 괄호안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의미.

3. 시사점

첫째,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내 가계부채의 특성상 정부 정책 수립 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약 60%(예금취급기관 기준)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시키는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 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 다만 과도한 부동산 시장 억제로 인한 실물 경기 부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 시행 시 단계적 시행 및 과열 지역에 대한 차등 적용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함

둘째,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가계가 부채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 증가 및 금리 인상이 필요하나 이는 국내 경기를 감안 시 단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임

- 따라서 향후 금리 인상 충격이 발생 시 가계부채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원금분할상황 및 고정금리 전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셋째, 상대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대책 및 서민금융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

- 저소득층의 경우 중고소득층에 비해 부채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원금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빠르게 개선될 여지가 높음

- 특히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중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확대를 통해 고금리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함 HRI

조 규 림 선임연구원 (2072-6240, jogyurim@hri.co.kr)
오 준 범 연 구 원 (2072-6247, jboh19@hri.co.kr)